

KBIZ 중소기업연구소
정책브리프

VOL26 | 2022. 6월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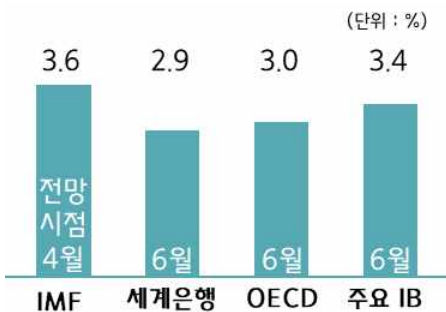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대내외 경제 현황 | 1 | III. 중소기업 정책연구 | 4 |
| II. 이슈진단 | 2 | • 중소기업 경영의 위험요인, HAZARD | |
| •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| | IV. [부록] 중소기업 경기전망 | 7 |

대내외 경제 현황

세계 경제

- '22년,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, 공급망 불안정, 중국 봉쇄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전망하며 성장률 일제히 하향 조정 (IMF $\Delta 0.8\%p$, 세계은행 $\Delta 1.2\%p$, OECD $\Delta 1.5\%p$)
 - 對러 의존도에 따라 영향이 상이하나 특히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향 조정
 -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불안정성 심화로 선진국은 재정·통화 긴축 재정을 확대해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개도국의 재정 부담 증가 초래 가능
 - OECD 회원국들의 '22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비 9.2%)이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('98년 9월, 9.3%)
 -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투자 위축 영향으로 하반기 회복세가 크지 않고 중국발 공급 충격이 글로벌 GDP 및 교역 모멘텀 약화

[기관별 2022년 세계 경제 수정 전망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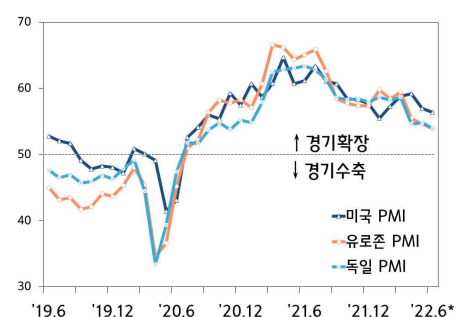
자료 : 각 기관 및 주요 IB는 국제금융센터

[세계 상품 교역량 증감률 추이]



자료 : 네덜란드 경제정책기획국 (CPB)

[주요국 제조업 PMI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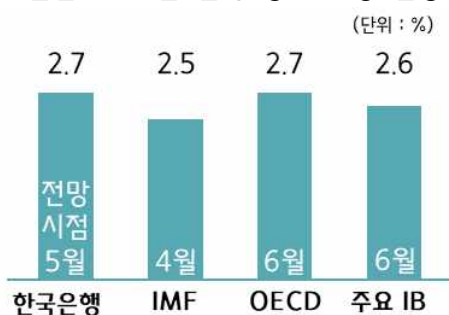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미국금관리협회, IHS Markit *예측치

국내 경제

- '22년 한국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 (IMF·OECD $\Delta 0.5\%p$)
 -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, 공급망 차질 등의 대외여건이나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민간 소비 회복과 핵심 산업의 대규모 기업 투자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 (IMF 등)
 - 민간 소비는 방역조치 해제, 추경 효과, 양호한 고용여건 등으로 점차 개선되어 향후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와 물가는 구매력 제약 요인
 - 물가가 상승한 품목 비중인 '물가상승 확산지수', '05년 조사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 ('22년 2분기, 69.8, 韓銀)
 - 다만 상향조정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외부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되었다고 판단 (기재부)
 - OECD는 인플레이션 안정적 관리, 취약계층 맞춤형 재정 지원, 구조개혁, 공급망 복원력·에너지 안보 제고 등을 권고

[기관별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]



자료 : 각 기관 및 주요 IB는 국제금융센터

[소비자심리지수]



자료 : 통계청

[수출액 증감률]



자료 : 관세청 *는 잠정치

최근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해법을 알아봤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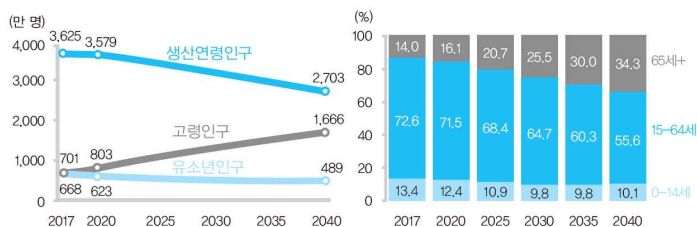
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(1/2)

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/제35대 대한경영학회 회장(KBIZ정책연구단)

I 일자리 현황과 문제

■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가장 중대한 대내외 환경 변화는 빠른 속도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진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

- 생산가능인구가 '20년 3,625만명, '40년 2,703만명, '60년 2,058만명으로 감소 예상
-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디지털 인력공급에 따른 법적·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사람경영 패러다임 전환



[그림 1]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

■ 미래의 인재 양성과 협업 네트워크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, 지역별 특화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지원 정책 필요

- 청년의 좋은 일자리 감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고, 지난 5년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현금성 지원은 대폭 증액되었으나, 이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이 여전함.
- 이는 단순 일자리 문제만이 아닌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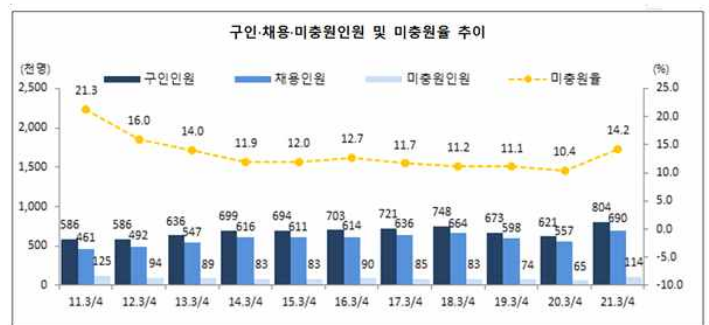
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책의 근간

-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, 단기 공공부문 재정일자리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경제로 요약됨

-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,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야 할 시기임

■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로 대기업 및 공공 부문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청년 취업 수요 집중

- 2021년 중소기업 미충원 인원은 10만 5,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% 증가했고, 미충원율도 16%에 이름. 대기업 미충원 인원 1만명, 미충원율 6.4%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 확인
- 산업별로는 제조업 미충원인원이 3만2,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 운수 및 창고업(1만6,000명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8,000명) 순



II 정책방향

■ (지역 혁신 인재 육성)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 인재를 육성하려면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첨단기술 전문 교육과정 제공 및 공동연구 수행 필요

-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, 청년들의 경력형성 지원을 위해 현장중심형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고, 내실있는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직무교육이 곧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

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(2/2)

- 구직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속련 인력양성에 기여
- 일경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인재채용 및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, 일터 혁신 디지털 전환 등 패키지 형태 정책 지원 필요
- (생애단계별 경력 재설계 및 취업연계 고도화) 지역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업종별 수요에 기반한 취업연계 방안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
 -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통과로 조선, 자동차, 석유화학, 제철, 석탄 등 전통산업의 쇠퇴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의 역군이었던 중장년층의 이·전직 지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미래 일자리 과제로,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 대상 경력 재설계 컨설팅 및 훈련 제공 필요
- (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강화)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연계 강화
 -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및 능력개발주치의 도입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
 -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및 서비스 질적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매칭 강화 (국민내일배움카드,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강화)
 - 기업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
 - 전 부처 디지털 인력양성 협업예산체계 고도화로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기업지원 체계 마련
 - 청년 주거, 일자리, 교육 등 맞춤형 지원 강화
- (고용 안전망 구축)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 안전망 구축 및 원활한 노동 시장 이동 지원
 -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(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검토)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방안 마련
 - 청년 지방이탈 및 지역소멸 대응 지역 중소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방안 마련
- (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) 일자리 미스매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,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지원을 아무리 늘려도 대기업 수준에 맞추기는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함
 - 대기업이 강성 노조에 밀려 과도하게 임금을 올리는 관행을 차단하고 중소기업도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필요
 - 기업의 국내 노동시장 선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, 노사관계 선진화 및 노사 간 신뢰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급선무
 -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낳는 정책이 도리어 일자리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
- (노동시장 유연성 확보) 유연안정성(flexicurity)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·복지 개혁, 기업주도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,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해소 필요
 - 대전환의 시대에는 초단기 계약, 특수형태 근로, 시간제 근로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, 비정규직을 완전하게 없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임금 등 근로 조건 격차 해소와 법적 안전망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
※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중소기업 경영의 위험요인, 해저드(HAZARD) (1/2)

KBIZ중소기업연구소 최영재 과장

- (배경)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산재, 위험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 또는 기회로 작용

- 중소기업이 ‘해저드(HAZARD)*’로 대변되는 6가지 위험요인의 현황과 그 극복방안을 모색

*해저드(Hazard) : 위험요소를 뜻하는 단어로 골프경기에서는 모래밭, 연못, 웅덩이, 개울 등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코스 내의 장애물을 지칭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H | High prices | 높은 가격 |
| A | Authorities | 당국의 지나친 개입 및 규제 |
| Z | Zero carbon&waste | 기후, 환경의 중요성 강화 |
| A | Acceleration | 트렌드 변화 가속화 |
| R | Relationship | 기업 간 관계 |
| D | Demography | 인구구조의 변화 |

I High prices(높은 가격)

- (현황) 글로벌 공급망 붕괴, 팬데믹 등 대내외 불안 상존과 기업 경영비용 부담 가중
 - 원자재, 에너지 등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급등
 - 최저임금 인상, 환율·금리 등 경제지표의 변동
- (中企 영향) 높은 가격은 중소기업 제조원가(재료비+노무비+경비) 및 금융비용 상승에 영향
 -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영업이익 감소, 경영 악화 및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

- (해결방안)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, 최저임금제도 개선,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

II Authorities(개입 및 규제)

- (현황) 한국은 OECD 중 규제수준이 높은 편으로 노동규제, 안전규제, 환경규제, 인증규제 등이 직접적으로 기업활동 제약
 - 규제부담 등으로 기업가정신이 낮은 편이며,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부담도 많은 상황
- (中企 영향) 규제의 역진성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, 규제비용 부담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아 R&D투자 감소, 제품 공정혁신 저해 발생
 - 과도한 규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
 - 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 또한 선진국 대비 낮은 편
- (해결방안)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, 차등적 규제 적용,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, 노동·안전·환경·인증 등 규제 부담 완화, 기업가정신 복원

III Zero carbon&waste(탄소중립 및 친환경)

- (현황)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부각으로 탄소중립, 친환경 등 기업경영의 주요요인으로 등장
 -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상 의무가 늘고,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등장
- (中企 영향) 중소기업은 경영자원 부족으로 탄소중립, 친환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구조전환 곤란으로 글로벌 공급망 배제 우려

중소기업 경영의 위험요인, 해저드(HAZARD) (2/2)

- 대기업 및 해외 수출 등 거래관계, 공급망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
-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, 오염물질 배출량 최소화 등 지속 요구
- (해결방안) 탄소중립, 친환경 경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, 탄소중립 자체 대응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화 촉진
- (中企 영향) 기술탈취 지속, 불공정거래 구조 형성,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 저해, 경영환경 악화 등 부정적 영향 초래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(중사장 1인당 매출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4.2배, 영업이익은 7.6배 격차)
- (해결방안) 기술탈취 관련 모니터링 지속,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,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

IV Acceleration(트렌드 가속화)

- (현황) 코로나19의 등장은 트렌드 변화 가속화의 계기
 - 디지털 전환, ESG, 플랫폼 중심 경제, MZ세대의 출현 등 경영환경 지속 변화
- (中企 영향) 디지털 전환, ESG, 플랫폼 중심 경제 등은 가속화되는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위기에 직면
 - 중소기업은 경영자원, 정보력, 트렌드 수용력 등 부족으로 트렌드변화에 취약
 - 디지털 격차 확대, 플랫폼 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
- (해결방안) 대·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격차 완화, ESG경영 지원과 자발적 ESG 준수 노력, 플랫폼과 중소기업의 상생, 중소기업의 구조 전환

V Relationship(기업간 관계)

- (현황) 대·중소기업간 상생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, 여전히 주요 정책과제
 - 기술탈취, 납품단가 후려치기, 중소기업 시장침투 등 대·중소기업간 관계에서 오는 위험은 여전

VI Demography(인구구조 변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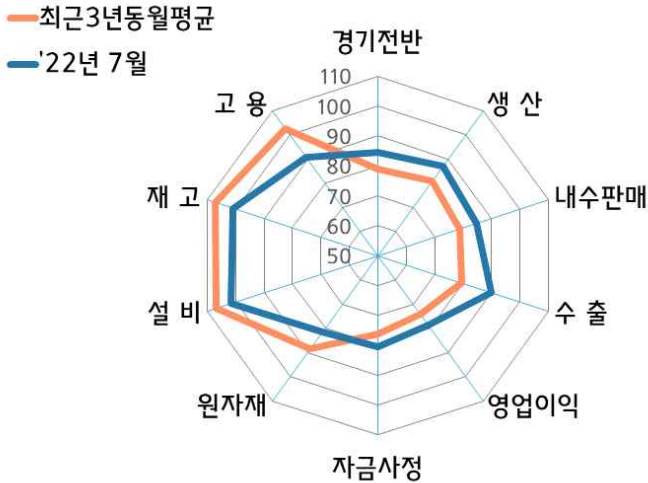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한국은 저출생,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진행 중,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심화 전망
 - 잠재 경제성장률은 하락세 지속, 내수시장 등도 영향
 - 미충원율(구인인원-채용인원)이 10% 이상으로 인력 미스매칭 현상 지속
- (中企 영향) 인구구조 변화로 중소기업 인력난 지속 및 노령화로 인건비 부담 가중 전망,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
 -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28년 신규인력이 수요보다 38만5천명 부족할 전망
 - 기업규모(대기업/중소기업), 지역(수도권/비수도권), 미스매치(기업/구직자)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
 - 임금, 근로시간 격차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 만연
- (해결방안) 스마트공장 확산 및 생산성 향상, 외국 인력 활용 등 인력수급 안정화,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지원

※본 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[부록] 중소기업 경기전망

7월 전망

| 경기전반 | 생산 | 내수판매 | 수출 | 영업이익 | 자금사정 | 원자재 | 설비 | 재고 | 고용 |
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|----|----|----|
| | | | | | | | | | |



■ '22년 7월 中企경기전망지수 81.5로 전월대비 4.6p 하락하며 체감경기 위축 전망

- 지난 4월 조사된 5월 전망이 최근 2년 중 최고치 (87.6)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
 - 주요 경영애로 추이에서 물류비상승 및 운송난 (28.4→36.0, 7.6%p ↑)과 고금리 (10.7→14.6, 3.9%p ↑)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
- '22년 5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.7%로 전월대비 0.2%p 상승, 전년동월대비 1.6%p 상승

■ 최근 3년간 동월 SBHI*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

* 100 초과시 긍정 전망 / 설비, 재고, 고용은 역계열 해석

자료: 중소기업중앙회 『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』

6월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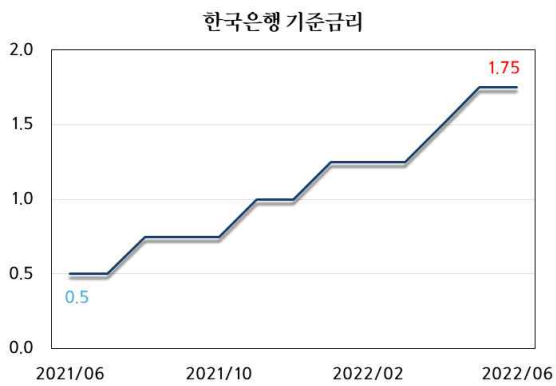
국제 유가
한국석유공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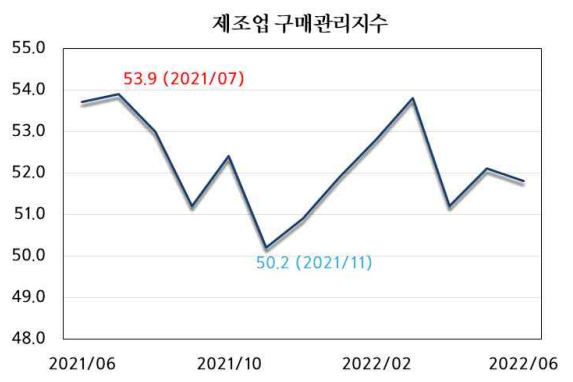
환율
한국은행



금리
한국은행



PMI
Investing.com



* 지수>50 : 경기확장, 지수<50 : 위축

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.

- 연구주제 제안
-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(이력서)
-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

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
kbizlab@kbiz.or.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